

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재검토 수순 밟는다

감사원 감사결과 후속조치 발표 환경부 “4대강 16개 보 모두 존치” 첫 실질적 조치 세종보 복구

환경부가 4대강 정책과 관련해 전 정부 결정을 뒤집는 재검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분류 16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를 제외하고는 현재 정상운영 중이라 첫 ‘실질적 조치’는 세종보 복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리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에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라면서 4대강 16개 보를 모

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간 지속된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 논쟁을 종식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른 시일에 댐 신설과 (강)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에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도 신속히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문재인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치수 관리와 이용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민주당 정권이 4대강 보 사업을 폄하하며 부수는데 이거(보)를 잘 지키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봄 남부지방 가뭄이 심각했을 땐 “방치된 4대강 보를 활용하라”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도 이런 기조에 발맞춰왔다. 지난 4월 환경부가 발표한 중장기 가뭄 대책에는 ‘4대강 16개 보 물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방침이 담겼다. 가뭄 대책이 발표되고, 곧이어 보와 댐-하굿둑 연계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환경부가 보의 존치에 전제인 ‘보 활용’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보 존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전 정부 4대강 정책 재검토 공식화는 미뤄두고 있는 상태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대표 등 참석자들이 폭우 희생자들과 실종자 수색작업 도중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끝없는 억지” “해법은 이동관 카드 포기” 과방위 공전 장기화...여야, 장외 신경전 가열

우주청·수신료·방통위 날선 공방

여야 대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전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놓고 충돌하면서 장외 신경전만 가열되는 모습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면서 “국회의원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민주당의 끝없는 억지였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관련 예산, 조직, 인력 구성 등 법안 통과 이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며 회의 개최를 막아섰다”며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지 않으면 파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의 마지막 요구는 ‘우주항공청 관련 법에 대해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낸다’는 단서 조항 하나 붙이지는 것이었다”면서 “이에 민주당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거부하는 방송법 개정

안의 소위 회부를 문서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 법안이 민주당의 불모인가”라며 “민주당이 과방위 정상화와 우주항공청 법안 통가를 원한다면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정치적 계산은 접어두고 채 논의의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야당 과방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마비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 기간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최악의 경우 방통위원 5인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해법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나머지 위원들을 서둘러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말 여당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과방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22일과 26일 민주당 주도로 회의가 개최됐지만, 장 위원장 대신 사회를 본 박 의원을 제외하고 여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힘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직권 개시

징계 수위 26일 회의서 논의 홍 시장, 거센 비판에 사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수해 골프’로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논

의할 예정이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다. 한 시간가량 골프를 치다 비가 와서 그만 두고 돌아갔다고 홍 시장은 설명했다.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되자 홍 시장은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

동과 발언’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당은 이튿날인 18일 김기현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홍 시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 시장은 논란을 빚은 17일자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하고 윤리위 측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4%...2주만에 4%p 하락

NBS...국힘·민주 지지 동반 하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4%로 각각 나타났다.

직전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4%포인트

(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3%p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는 ‘결단력이 있음’이 17%로 가장 높았다.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감’(7%), ‘공정하고 정의로움’(5%)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임’(18%), ‘경험과 능력이 부족함’(17%),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함’(11%) 등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 조사보다 4%p 하락한 30%였고 더불어민주당은 5%p 떨어진 23%였다.

야당의 지지율은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각각

35%(국민의힘)·27%(민주당)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6개월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 대비 7%p 상승한 39%로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내년 4월 22대 총선에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3%,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42%로 비슷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다시 일하는 행복!

전라남도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전라남도 4060세대 신중년의
맞춤형 일자리지원기관으로 조기퇴직과 은퇴 이후
노후준비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부센터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전남일자리지원센터 1층 TEL:061-750-7736

서부센터 무안군 오룡 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지원센터 1층 TEL:061-287-1143

신중년 맞춤 전문상담

- 신중년 전문상담사 구인·구직 상담
- 경력분석을 통한 이·전직 원스톱 취업지원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 맞춤형 취업서비스 제공 및 취업 후 사후관리

전라남도 4060 구직활동지원사업

- 구직활동수당 지원(50만원 2회/최대 100만원)
- 상담·컨설팅·교육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플랜별 맞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모집

선발 및 예비교육 실시

플랜별배치 및 취업지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집중 취업지원

취업 및 사후관리